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음 1월 21일) 제36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합성패키지'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에 춘풍 불어 넣자"

김관영 도지사, 민생 한파 속 속도감 있는 대응 주문

도, 청년활력수당 등 통해 청년들의 전북 정착 도모
취업부터 자산 형성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소리문화전당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기획한 역사 판타지 공연 '태권유랑단 녹두'가 3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에서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과 녹두 공연 출연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16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는 "지속되는 민생 한파 속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지역경제에 춘풍을 불어 넣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인 경제 불황 속에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이 도는 것 자체가 민생 회복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홍보를 지시했다.
또한, 최근 도내 가금농장에서 AI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AI 발생 농가와 인접 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취약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몇 개월 간 선

제적 대응에 애는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고생했다"며 격려를 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발굴 중인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도 미래 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과 에너지·바이오·방산 등 글로벌 선도 산업을 과감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더욱 정교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관련해 도의 첨단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로 삼고,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지자체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우리도 종합청렴도가 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언급하며, "평가등급 상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4급 이상 간부는 직원들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여러 공직기강 교육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성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최근 4년간 전북에서만 3만4,000여명의 청년(18~39세)이 타 지역으로 떠났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성패키지 사업'은 '합계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 청년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지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 청년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00명이며, 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교재비, 면접 준비비 등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은 생활용품, 교통비,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직 유지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근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에서 39세까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

자체에서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융 및 재무 컨설팅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합성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의 93.1%가 추천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재직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도내 거주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0.4%, 만족도가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의견

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월 모집공고 후 현재 대상자 선정 단계에 있으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3월 초 모집공고를 통해 신규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거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도내 51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선거권자는 19~21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선거는 내달 5일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교원보호공제 법률비 지원 대폭 확대

1년새 2건에서 24건 · 보상액도 480만에서 1억1560만원
전북교육청, 소송비 선지원 등 통해 법적 안정성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보호공제 법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2024년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1,56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보상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원에 비해 각각 12배, 2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교원배상책임에 대해 민간 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지난해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표준 약관을 수정해 마련한 주요 담보 내용으로는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지원 △분쟁조정 지원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이를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에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교원보호공제 시행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